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1993. 12.

余仁坤 (國際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序 文

구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연방은 대내적으로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대외적으로 구소련과는 구별되는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冷戰以後時代를 맞이하여 전개되고 있는 한·러간의 제반 관계 확대는 러·북한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한국은 주변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러시아연방의 대북한 정책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민족통일연구원 국제연구실에서는 러시아연방의 대북한정책이 한국의 안보와 통일문제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이에 대한 對應策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추진하였다.

본 연구는 구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연방의 대북한정책 변화추이에 초점을 맞추어 分析·展望하였다.

본 연구가 동북아 국제환경 및 러시아연방의 대북한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한국의 안보와 통일정책 입안에 기여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993. 12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要 約

第 I 章 序 論

러시아연방은 국내정국 안정과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국내문제에 치중하는 한편, 동북아지역에서는 자국의 경제이익과 안보이해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實用的인 외교정책을 추진하면서 제분야에서 한국과의 관계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한국도 미·중·일과 함께 한반도통일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러시아연방과의 관계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동북아지역에서 러시아연방의 대북한 영향력이 구소련시대와 비교할 때 상당히 약화되었는 바, 러시아연방은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 대북한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의 대북한정책 조정은 21세기 통일한국 시대를 앞두고 한반도의 平和定着과 統一環境 조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러시아연방의 국내개혁 현황과 脫冷戰時代의 동북아정책 및 대한반도정책을 개괄적으로 고찰하고, 러시아연방의 대북한정책 변화추이를 심도있게 분석·전망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구축과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한국의 對應方案을 모색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第 II 章 러시아聯邦의 改革現況과 東北亞政策

1. 러聯邦의 改革現況

러시아연방에서는 엘친 대통령 중심의 개혁파와 의회 중심의 보수파간에 개혁노선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으로 정국불안이 2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1993년 12월 12일 국민투표를 통하여 강력한 대통령제 新憲法이 채택됨으로써 엘친 대통령은 자신의 개혁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의회총선에서 극우민족주의와 공산주의 세력이 득세함으로써 러시아연방 정국의 尙後 전개방향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러시아연방의 경제는 구소련 국가계획경제의 모순점과 엘친 대통령에 의하여 추진된 급진개혁정책의 제반 부작용 때문에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영기업의 민영화 프로그램은 만족할 만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무역수지의 흑자기조가 나타나고 있고 서방의 對러 경제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연방의 향후 정국은 새로운 양원제 민주의회의 구성에도 불구하고 개혁방향을 둘러싼 보·혁간의 대립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나, 강력한 대통령제를 기초로 하는 신헌법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첨예한 權力鬭爭은 예상되지 않는다. 또한 엘친 대통령은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개혁속도를 완화, 의회와 국민들의 개혁지지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러聯邦의 東北亞 및 韓半島政策

러시아연방은 안보강화, 자유민주주의국가로의 전환, 강대국 지위 유지, 시장경제로의 전환 및 세계공동체로의 편입을 위한 유리한 여건조성을 對外政策 목표로 삼고 있다. 러시아연방의 동북아정책은 이러한 대외정책 목표와 동북아 정세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추진될 것인 바, 러시아연방은 동북아지역에서 상이한 국가간의 정치적, 전략적, 경제적 제반관계가 상호의존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자국이 지역국가들과 선린관계를 유지하고 역내 경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興件들이 조성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연방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기초로 역내에서 지도적 역할을 견지하려는 미국의 동북아정책, 일본의 역내 영향력 증대, 중국과 국익의 대립 가능성, 한반도 상황의 불안정, 역내의 영토분쟁 가능성, 역내 경제관계의 불균형 등을 우려하고 있다. 동북아정세와 관련, 상기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러시아연방은 역내에서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고 역내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아·태국가로서 位相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북한은 현재 '우리식 사회주의'의 이념적 위상을 정립하고 있으나 체제자체의 모순으로 대내적 경제난에 직면해 있으면서 대외적으로는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북한은 체

제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또한 대미·대일 수교를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할 목적으로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대내적으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지속하면서 대외적으로 한반도 주변4강과의 국교수립을 완성하고 상호간 정치·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은 급성장된 경제력을 기초로 국력과 위상에 상응하는 國際的 役割을 수행하려 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한반도정세와 관련, 러시아연방은 현재 한국에 편향된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기조로 남북한간의 평화공존, 한국 중심의 경협증대, 한반도 비핵화 및 군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반도통일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지지하고 있다.

第Ⅲ章 러시아聯邦의 對北韓 認識 및 政策

1. 對北韓 認識의 變化

「신사고」외교를 표방한 고르바초프 시대에는 한·소관계 뿐만 아니라 소·북한관계도 현저하게 발전되어 각 분야에서의 협력이 증대되었는 바, 구소련이 이와 같이 적극적인 대북한정책을 수행한 것은 극동지역의 안보확보를 위한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 고려, 중국의 한국 접근에 따른 대북한관계의 강화 필요성, 북한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통한 극동에서의 군사적 행동반

경 확대 등 때문이었던 것으로 評價된다.

그러나 러시아연방은 냉전이후시대를 맞이하여 자국의 전략적,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대북한관계를 현실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의 대북한 인식 변화는 이념면에서 북한과의 사회주의 연대성 단절, 정치면에서 한반도 안정을 위한 南北韓 等距離外交의 불가피성, 군사면에서 1961년 동맹조약 제1조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경제면에서 북한보다는 한국과의 경협확대 필요성 등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연방은 이와 같이 변화된 인식을 기초로 대북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對北韓政策

가. 同盟關係로부터 友好關係로의 轉換

대외적으로 탈이념적 외교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러시아연방은 과거의 이념적, 군사적 특수관계를 배제하고 우호관계에 기초한 대북한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1961년 조약 제1조 自動軍事介入 조항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현재 입장은 동규정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기는 하지만, 러시아연방은 이를 “북한에 의하여 도발되지 않는 침략의 경우 동 조항에 의거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한 약속 이행의 의무가 있다”고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이는 남북대화의 진전에도 불

구하고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한·미 상호안보 조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을 위하여 북한에 대한 공식적인 안전보장도 필요하다는 러시아연방의 인식 때문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연방은 47년 동안 제분야에서 계속되어온 모스크바와 평양이 이념적 차이로 관계를 축소하거나 단절하는 것은 자국의 대외정책 목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1961년 조약의 他規定들을 기초로 양국관계를 유지·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 9월 한·소수교를 계기로 급격히 냉각되기 시작한 러·북간의 실질적인 정치관계는 외교접촉 감소, 북한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핵개발 포기압력, 김일성 父子世襲體制에 대한 러시아연방 언론의 부정적인 시각 등으로 현재 악화된 상태에 있다. 반면 한때 교착상태를 보였던 러·북간의 군사관계는 회복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나. 經濟關係의 正常化 摸索

현재 러·북간 경제관계는 1991년 이후의 무역감소, 양국의 경제난, 구소련 채무에 대한 북한의 상환 불이행 등으로 弱化된 상태에 있다. 그러나 러시아연방은 향후 대북한관계가 상이한 이념때문에 정치·군사면에서 보다는 경제면에서 더 발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상호이익의 원칙에 기초하여 악화된 경제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대북한 경제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쌍방간 수출품의 공급지속, 합작투자의 확대, 러시아 극동지역개발에 북한 노동력의 이용 등과 같은 협력에 利害를 갖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북한과 1992년 7월 남북한 관통 시베리아 가스관 부설, 1993년 8월 나진항의 국제무역항으로의 개발 등에 합의하였고 구소련에 대한 북한의 부채 33억루블 환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러시아연방은 연해주와 사할린 섬에서 진행중인 자유경제지역 창설계획이 성공한다면 북한과의 경제 및 무역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다. 核開發 沮止

제3세계로의 핵확산 방지와 동북아정세 안정을 위하여 한반도 비핵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연방은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노력하고 있으나 북한 핵개발 문제를 다른 視角에서 보고 있는 바, 우리가 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연방은 한반도 핵문제가 한국이 1970년대에 독자적인 핵개발을 시도하고 미국이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시점으로부터 야기되었다고 인식하고 있고, 한국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 때문에 평양측이 현재 갖고 있는 不安感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 러시아연방은 북한이 플루토늄

추출상의 문제로 아직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나 개발 능력이 있으며 개발여부는 정치적 결정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하여 평양에 압력을 가하는 한편, 미국 등 서방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러시아연방의 기본적인 입장은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러시아연방은 미·북간 핵협상에 아직 희망을 걸고 있으며, 양국간 협상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경제제재를 논의하는 경우 북한을 刺戟시킬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연방은 어떠한 경우든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라. 人權概念의 適用

보편적 국가관계에서 인권을 중시하고 있는 러시아연방은 1992년 1~3월 「제네바 인권문제 국제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공식 거론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시베리아에 있는 북한 벌목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러시아연방은 모스크바 대학의 북한 유학생 김명세씨에 대한 政治亡命과 1993년 10월 한국방문을 허용하였다.

북한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인권개념 적용은 러시아가 사회주의국가로부터 인권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국가로 전환되었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를 국제문제로 看做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 러·北關係 展望

엘친 대통령은 향후 대내적으로 개혁속도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나 대외적으로는 기존의 외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러시아연방은 자국의 경제이익과 안보이해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실용적인 동북아정책을 계속 수행할 것이고 이러한 틀 속에서 러시아연방의 대북한정책도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反面,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 김정일 권력승계체제의 공고화,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제한적 개방과 대미·대일 수교라는 목표를 가지고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향후 러·북관계는 정치·경제·군사면에서 다음과 같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악화된 상태에 있는 러·북 양국의 정치관계는 러시아연방의 국내문제 중심정책과 북한의 대미·대일 관계개선 모색 등으로 단기간 내에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고 미·북, 일·북간 수교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러·북간 정치관계가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국익을 기초로 漸進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북 양국의 경제난, 연료와 운송수단의 부족, 북한의 부채문제 미해결 등으로 양국간 경제관계도 단기간 내에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러시아연방의 경제가 회복되고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본격적으로 적극화되어야 양국간 무역이 증대하고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및 두만강유역 개발에 대한 양국간 經協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러시아연방은 대북한관계의 단절이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서 자국의 안보전략체계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바, 북한과의 군사교류를 정상화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부품 공급을 지속하며 무기판매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러시아연방은 한반도 비핵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의 핵무장 및 역내 핵경쟁 억지次元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대북한 압력과 서방과의 공조체제 유지라는 기존의 정책을 持續할 것으로 전망된다.

第Ⅳ章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推進方向

1. 短期: 南北韓 平和共存의 現狀維持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러시아연방은 단기적으로 남북한 평화공존의 현상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에 편향된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탈피하여 좀 더 균형된 등거리외교를 摸索할 것으로 전망된다.

政治面에서, 러시아연방은 한반도의 급속한 통일이 동북아질서 불안정을 수반, 자국의 개혁정책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남북한 평화공존 유지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經濟面에서, 러·북간 경제관계의 큰 진전은 양국의 경제난과 북한 개방정책의

제약성 때문에 기대되지 않는 바, 러시아연방은 당분간 한국중심의 경제외교를 탈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軍事面에서, 러시아연방은 동북아 지역내 유리한 안보환경 조성과 아·태국가로서의 위상확립 및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남북한과 군사관계를 발전시키고, 「아·태지역 안보협의체」의 준비단계로서 「동북아 다자간안보협의체」 구성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러시아연방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남북한에 대해 상호 양보와 타협을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2. 長期: 韓半島統一 過程에 積極 參與

러시아연방 정부나 학계내에서는 향후의 한반도통일 방식과 관련하여 일치된 의견이 없는 바, 일부는 한반도통일이 韓國主導下에 달성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1993~1995年頃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교차승인 완결 → 1996~1998年頃 군사분야에서의 남북한간 신뢰구축과 군비축소 및 남북정상회담 개최 → 1999~2001年頃 남북한 경제통합 및 「남북연합」과 「고려민주연방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 2002~2004年頃 정치·경제체제 통일 → 2005年頃 완전한 민족통일 실현과 같은 방향으로 한반도통일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러시아연방이 남북한간의 정상회담 실

현시까지는 남북한의 자주적인 행동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는 한반도의 통일을 향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關與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연방은 통일한국이 자국에 우호적인 국가가 되고 일·중의 역내 영향력 증대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浮上할 경우에는 한반도통일을 적극 지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중의 군사대국화 견제 필요성 때문에 美軍의 한반도 주둔을 계속 용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第 V 章 韓國의 對應方案

한국은 한반도 평화구축과 통일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對러시아聯邦 政策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政治·軍事面에서 첫째, 한국은 엘친 대통령의 지속적인 개혁 추진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되, 경제상황의 악화로 1996년 엘친 대통령이 재집권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체르노미르딘 총리, 군산복합체 출신의 소스코베츠 제1부총리 등과 유대관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러시아연방은 한국의 구소차관 상환 문제를 첨단무기 제공 및 공동개발·생산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으나 한국은 북한과 동일한 무기보유로 인한 무기체제의 혼란 및 남북한간 군비경쟁의 가능성, 대미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러시아연방은 한국이 언제라도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하에서 한국

에 대한 북한의 핵불안감에 어느 정도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핵무기 保有意思가 없음을 러시아연방측에 주지시키는 한편, 북한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전면사찰 뿐만 아니라 남북한 상호핵사찰을 관철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은 러시아 핵과학자들의 개별적인 북한입국과 핵물질의 밀수출 방지를 러시아연방측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러시아연방은 향후 상업적 차원을 구실로 대북한 무기수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바, 한국은 이를 경계하고 러시아연방측의 자제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經濟面에서 첫째, 한국은 한·러간의 최대현안인 구소차관 문제를 알루미늄, 원유, 농축우라늄 등 천연자원의 현물상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엘친 대통령은 현재 군산복합체 지도자들과 군부의 지지확보 차원에서 군수산업의 민수전환 속도를 늦추고 있는 바, 한국의 러시아연방 민수화작업 참여계획에 대한 再調整이 요구된다. 셋째, 중국과 북한은 나진항 확장개발사업과 철도건설에 합작형태의 한국기업 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바, 한국은 경제외교 다변화와 북한의 동북아경제권 편입 및 개방유도 차원에서 나진-선봉지구 하부구조 개발을 위하여 투자하고 있는 러시아연방 기업들과도 합작형태로 이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韓半島 統一關聯 問題面에서 첫째, 러시아연방내 다수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한국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남북연합」이 1999~2001年頃 수립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동시에 북한

이 주장하고 있는 「고려민주연방제」식의 통합도 같은 시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豫見하고 있다. 「고려민주연방제」의 궁극적인 목표가 한반도 공산화에 있는 바, 한국은 북한 대남 전략의 이중성과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의 본질을 국제학술회의 등을 통하여 러시아연방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에게 정확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러시아연방의 一部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에 의하여 흡수통일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한반도에서의 최악의 상태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러시아연방측의 희망과 같이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방안임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러시아연방은 현재 북한에 대하여 인권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바, 한국은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문제도 인권차원에서 다루어 줄 것을 러시아연방측에 촉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한 交叉承認의 완결시 러시아연방은 대북한 영향력 유지 및 확대 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한국의 통일환경 조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러시아연방과의 제반관계를 확대하는 한편,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동북아 다자간안보 협의체 구성을 위한 韓半島 周邊 4強 外交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目 次

第 I 章 序論	1
第 II 章 러시아聯邦의 改革現況과 東北亞政策	3
1. 러聯邦의 改革現況	3
2. 러聯邦의 東北亞政策	16
3. 러聯邦의 對韓半島政策	22
第 III 章 러시아聯邦의 對北韓 認識 및 政策	33
1. 對北韓 認識의 變化	33
2. 對北韓政策	36
가. 同盟關係로부터 友好關係로의 轉換	37
나. 經濟關係의 正常化 摸索	41
다. 核開發 沮止	45
라. 人權概念의 適用	51
3. 러·北關係 展望	52
第 IV 章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推進方向	57
1. 短期: 南北韓 平和共存의 現狀維持	57
2. 長期: 韓半島統一 過程에 積極 參與	60
第 V 章 韓國의 對應方案	63

第 I 章 序 論

러시아연방은 지난 2년간 대내적으로 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과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창산하고 지정학적 이해와 경제관계를 중시하면서 서방민주·자본주의권으로의 편입을 위한 外交政策을 수행하여 왔다. 러시아연방은 특히 자국의 경제이익과 안보이해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실용적인 동북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0년 9월 30일 구소련과 국교를 정상화한 바 있는 한국은 미·중·일과 함께 韓半島統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구소련의 계승국인 러시아연방과의 관계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연방도 국내정국 안정과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국내문제에 치중하면서 諸分野에서 한국과의 관계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동북아지역에서 러시아연방의 대북한 영향력이 구소련시대와 비교할 때 상당히 약화되었는 바, 러시아연방은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 대북한정책을 調整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의 대북한정책 조정은 21세기 통일한국 시대를 앞두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환경 조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러시아연방의 국내개혁 현황과 탈냉전시대의 동북아정책 및 대한반도정책을 概括적으로 고찰

하고, 고르바초프 시대와는 상이하게 구별되는 인식을 기초로 추진되고 있는 러시아연방의 대북한정책 變化推移를 심도있게 분석·전망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구축과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려는데 目的이 있다.

第 II 章 러시아聯邦의 改革現況과 東北亞政策

1. 러聯邦의 改革現況

러시아연방에서는 엘친 대통령 중심의 개혁과와 의회 중심의 보수파간에 개혁노선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으로 政局不安이 2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1993년 12월 12일 국민투표를 통하여 강력한 대통령제 신헌법이 채택됨으로써 엘친 대통령은 자신의 개혁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議會總選에서 극우민족주의와 공산주의 세력이 득세함으로써 러시아연방 정국의 향후 전개방향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러시아연방의 경제는 구소련 국가계획경제의 모순점과 엘친 대통령에 의하여 추진된 급진개혁정책의 제반 부작용 때문에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영기업의 민영화 프로그램은 만족할만한 速度로 진행되고 있으며, 무역수지의 흑자기조가 나타나고 있고 서방의 대러 경제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연방의 향후 정국은 새로운 양원제 민주의회의 구성에도 불구하고 개혁방향을 둘러싼 보·혁간의 대립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나, 강력한 대통령제를 기초로 하는 新憲法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첨예한 권력투쟁은 예상되지 않는다. 또한 엘친 대통령은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경제정책 基調를 유지하면서 개혁속도를 완화, 의회와 국민들의 개혁지지를 유도할 것으로 展望된다.

가. 政治面

1991년 12월 「독립국가연합」(CIS)의 출범과 더불어 옐친 대통령 중심의 개혁과는 러시아연방에서 개혁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력한 대통령중심제 헌법을 채택하여 政治安定을 기하는 가운데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반면, 보수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권력분점과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희망하였다. 개혁노선을 둘러싼 保·革間의 상반된 입장에서부터 야기된 권력투쟁은 헌법상 모순된 「이중권력」 구조에 의하여 더욱 심화되었다.¹⁾

의회내 보수파들이 급진경제정책을 주도하여 왔던 가이다르 총리서리의 임명동의안을 부결하고 경제난을 이유로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등 반개혁 노선을 강화함에 따라서 옐친 대통령은 1993년 4월 25일 輿論調査의 성격을 띤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다. 국민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배경은 첫째, 지속되고 있는 經濟難과 보·혁간 권력투쟁에 따른 정국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 둘째, 옐친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적극적인 지원²⁾ 등으로 분석된다.

1) 소연방 붕괴 이전인 1991년 6월 러시아공화국은 국민직선의 대통령제를 도입하여 옐친을 임기 5년의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으나, 의회 중심의 구소련헌법이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설기구인 최고회의로 구성되는 의회가 헌법상 국정결정에 있어서 대통령보다 우월권(대통령의 의회해산 불인정, 인민대표대회의 대통령 해임권, 대통령의 총리 임명시 최고회의의 승인, 최고회의의 장의 경제통제권 등)을 갖고 있었다.

2) 클린턴 미대통령은 옐친 대통령의 퇴진으로 야기될 수 있는 러시아연방에서의 보수정권 등장과 군사대립 재개 가능성의 방지, 자국 군사비 지출의 축소, 대러

국민투표는 4가지 사항에 대한 국민들의 支持與否를 묻는 형식으로 실시되었는 바, 설문내용과 총투표율 및 각 설문별 찬성·반대율은 다음 <表 1>과 같다.

<表 1> 1993.4.25 國民投票 結果

(總投票率 66%)

설문사항	찬성		반대	
	투표자중 %	유권자중 %	투표자중 %	유권자중 %
제1항: 엘친 대통령을 신임하는가?	57.4	37.7	39.9	25.3
제2항: 엘친 정부의 사회·경제 개혁정책을 지지하는가?	53.7	34.0	45.5	28.8
제3항: 조기 대통령선거를 지지하는가?	49.1	30.9	49.8	31.4
제4항: 조기총선을 지지하는가?	70.6	44.8	31.5	19.9

出處: *Country Report: Russia, 2nd quarter 1993* (London: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993), p. 13.

국민투표 결과 엘친 대통령은 자신의 신임과 사회·경제 개혁 정책에 대한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입지가 강화되었으나 早期大選과 早期總選에 대한 지지를 얻는데 실패함으로

경제적 진출 등을 위하여 엘친 대통령의 개혁정책을 부시 대통령 당시보다 더욱 지지하고 있으며 캐나다 밴쿠버의 미·러정상회담(1993. 4. 3~4)에서 16억 2천만달러의 직접 경제지원을 약속하였다. 또한 서방선진 7개국(G 7)도 엘친 대통령의 개혁노선을 긴급 지원하지 않으면 서방진영도 안정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동경에서 개최된 외무·재무장관회담(1993. 4. 14~15)에서 434억달러에 달하는 대러 경제지원에 합의하였다.

써 보수파와의 갈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개혁파와 보수파는 국민투표 결과를 각각 자파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자파의 승리를 主張하였는 바, 이는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가 제1항 및 제2항의 가결기준(총투표자의 과반수 찬성)과 제3항 및 제4항의 가결기준(총유권자의 과반수 찬성)을 상이하게 규정하여 국민투표의 勝敗基準을 모호하게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친 대통령은 의회를 迂廻, 89개 지역 및 공화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制憲會議(Constitutional Assembly)를 소집하여 신헌법 제정 → 의회해산 및 조기총선 실시 → 새로운 양원제 민주의회 구성이라는 권력구조 개편작업에 착수하였다. 제헌회의는 6월 12일 신헌법안을 승인하였으나 제헌회의 자체가 법적권한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수파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보수파는 獨自的인 헌법안을 마련하여 10월 인민대표대회에서 채택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또한 보수파는 정부관료와 군부의 부정·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대규모 군중시위를 선동하는 등 개혁파에 대한 攻擊을 강화함으로써 보·혁간 대결이 더욱 增幅 되었다.

엘친 대통령은 이러한 정국불안을 해소하고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9월 21일 의회해산과 조기총선이라는 超憲法的 조치를 취하였는 바, 이는 보수파의 무력도전을 초래하였으나 엘친 대통령에 의하여 강경진압 되었다. 개혁파의

일방적 승리는 첫째, 엘친 대통령이 4월 25일 국민투표 결과로 국민들로부터 자신에 대한 신임과 개혁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정치적, 도덕적 名分을 보유하게 되었고, 둘째, 보안기관 및 군 지휘부의 엘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확고하였으며, 셋째, 미국 등 서방측이 엘친 대통령을 전폭 지지하였기 때문이었다.

엘친 대통령은 의회해산 이후 정적 루츠코이 부통령이 주도하던 「자유러시아당」의 기능정지 및 공산주의의 잔재인 지역의회의 解散令을 발표하는 등 정국 주도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가운데 총선체제를 구축하였다. 특히 가이다르 제1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파들은 10월 親엘친 세력을 규합하여 「러시아의 선택」을 새로이 창당하였다. 12월 12일 러시아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다당제 민주선거에서는 강력한 대통령제를 기초로 하는 신헌법³⁾이 총유권자 54.8% 투표에 투표자 58.4%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上院(연방회의 178석)과 下院(국가두마 450석) 총선에서는 <表 2> 및 <表 3>과 같이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무소속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었다. 전국구 225석과 지역구 225석의 하원의석중 친엘친 개혁지

3) 신헌법은 대통령의 총리 등 주요각료 임명권, 하원 해산권, 비상사태 및 포고령 선포권, 지방행정 당국의 활동 저지권과 토지사용제 및 무역, 거주이전 등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지 정당이 28%, 극우 자유민주당과 공산당 및 농업당 등
反엘친 정당이 34%, 중도파 정당이 11%, 무소속이 26%를
각각 차지하였다.⁴⁾

<表 2> 上院 議席分布

정 당	의 석 수	의석점유율(%)
무 소 속	144	83.6
공 산 당	12	7.0
러시아선택	8	4.7
기타 정당	18	4.7
계	172	100.0

註: 89개 선거구중 3개구는 후보자수 미달로 1994. 3 재선거 예정
出處: Rossiyskaya Gazeta, 1993. 12. 28.

이러한 총선결과는 엘친 대통령의 개혁노선에 대한 국민
들의 불만이 극우 및 보수파 지지를 통해 表出되었으며, 지
역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려는 유권자들의
의식이 무소속 후보들의 대거 당선을 가져온 것으로 分析
된다.

12월 12일 국민투표 결과로 엘친 대통령은 인민대표대
회, 최고회의 등 구소련 정치체제의 殘滓를 완전 청산하고

4) 인민대표대회 당시에는 1993년 3월 현재 총대의원 1,033명중 개혁파가 14.7%,
보수파가 29.1%, 중도파가 37.0%, 무소속이 19.2%를 각각 차지하고 있었다.
『日本經濟新聞』, 1993. 3. 25.

<表 3> 下院 議席分布

성 향	정 당	전국구	지역구	의석수
개 혁	러시아 선택	40	31	71
	야블린스키 연합	20	7	27
	러시아 통일화합당	18	4	22
	민주개혁운동	0	5	5
	경제자유당	0	2	2
	(소 계)	(78)	(49)	(127)
극 우 보 수	자유민주당	59	5	64
	공산당	32	16	48
	농업당	21	18	39
	(소 계)	(112)	(39)	(151)
중 도	러시아 여성	21	3	24
	러시아 민주당	14	2	16
	시민동맹	0	7	7
	러시아의 미래와 신인당	0	1	1
	(소 계)	(35)	(13)	(48)
무소속		0	118	118
	총 계	225	219	444

註: 지역구 6석은 선거불참과 유효투표율(25%) 미달로 1994. 3 재선거 실시 예정

出處: Rossiyskaya Gazeta, 1993. 12. 28; 「讀賣新聞」, 1994. 1. 11.

자신의 개혁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개혁과의 의회내 다수의석 확보 실패, 극우·보수정당의 부상, 중도파 정당의 약화 등으로 개혁정책을 가속화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展望

된다. 엘친 대통령은 향후 개혁속도를 완화함으로써 자신의 개혁정책에 계속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큰 극우민족주의 자민당과 공산당 세력의 불만을 약화시키는 한편, 의회내 중도파와 무소속 의원 및 국민들의 개혁정책에 대한 지지를 誘導할 것으로 예측된다.

나. 經濟面

엘친 대통령은 경제면에서의 주요목표를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거시경제적 안정화에 두고 「충격요법」(shock therapy)에 의한 急進的인 경제개혁정책을 추진하여 왔는 바, 그 주요내용은 ① 긴축재정과 금융정책을 통한 경제안정화, ② 가격자유화, ③ 사유화, ④ 군수산업의 민수산업으로의 전환, ⑤ 대외 개방이다.

러시아연방은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방비와 정부보조금을 삭감하고 28%의 부가가치세를 導入하는 한편, 루블안정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생필품에 대한 국가보조로 인한 재정적자 축소, 공급증가를 통한 물자부족 해소 등을 위하여 약 90%의 소비재와 80%의 공산물에 대한 가격자유화정책이 1992년 1월 2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기업활동의 경제효율성과 예산세입 증대 등을 위하여 14만 6,000여개 국영기업을 신속히 民營化할 계획으로 있는 바, 이의 촉진을 목표로 1992년 10월 1일부터 국민들에게 일종의 주식인 액면가 1만루블의 「사유화증서」(vouchers)

를 무상분배하였다. 또한 러시아연방은 전체 농지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국영농장과 집단농장(약 26,700개)의 사유화를 위하여 일부 토지와 농장설비 등을 농민들에게 무상분양하는 한편, 개인과 법인체의 토지매매, 상속, 증여, 임대를 허용하는 「土地私有化 布告令」을 1993년 10월 27일 발표하였다.

러시아연방은 기계산업의 약 80%가 군수산업(국민총생산의 25%)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1992년 3월 20일 「러연방 군수산업 민수전환법」을 채택하고 군수관련 500여 기업을 민需化하여 군수산업의 총생산 중 민수제품 생산율을 증가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러시아연방은 대외무역 활성화와 자본주의권으로의 편입을 위하여 루블화의 변동환율제를 채택하였고, 연료 및 안보관련 물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 대한 수출쿼터제와 인가제를 廢止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연방의 이러한 경제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안정화, 토지사유화 등의 면에서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군수산업의 민수화 작업 推進速度는 현재 계획보다 늦추어지고 있다.

러시아연방정부는 국내총생산(GDP) 10%내의 재정적자를 요구하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에 따라서 1993년도에 GDP 9.5%(8조 5천억루블)의 적자예산안을 마련하였으나, 1993년도 財政赤字는 GDP의 24~26%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⁵⁾ 러시아연방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1993년 1~9월간

5)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Russia, 2nd quarter 1993* (London: EIU, 1993), p. 30; *3rd quarter 1993*, p. 23.

산업생산이 1992년 동기대비 17% 감소하여 GDP가 11% 하락하였으며 투자도 10% 축소되었다.⁶⁾ 가격자유화정책은 1992년도에 2,500%의 물가폭등을 야기하였고, 1993년도에는 인플레이율이 약간의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월 20~22%의 높은 水準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1992년 8월에 1달러당 163루블에 불과하였던 루블화 환율이 계속 폭락하여 1994년 1월 17일 현재 1달러당 1,402루블이다.

러시아연방의 토지자유화정책은 2천만명에 달하는 러시아 농민들 중 약 70%의 반대에 직면하여 있다. 다수의 농민들은 국영 및 집단농장 관리인들의 농기계와 농산물 판매유통망 독점, 농기계 및 자금력 부족 등으로 자영농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집단농장에 殘留하기를 희망하고 있다.⁷⁾

러시아연방 경제개혁의 관건으로 간주되어 왔던 군수산업의 민수화 작업은 새로운 체제의 미정착으로 인한 정부의 거시조정역할 부족, 군산복합체 관리자들의 보수성, 외국투자 여건의 미성숙 등으로 難關에 직면하여 왔다. 특히 엘친 대통령은 1993년 11월 9일 “군수산업 기업과 조직의 경제상황 안정화 및 국방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에 관한 포고령을 발표함으로써 군수분야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군수산업의 민수화 작업 추진속도를 완화하고 있다. 엘친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는 의회해산 및 보수세력과의 유혈충돌에 따른 政治危機를 계기로 군산복합

6)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10 November 1993, pp. 65~66.

7) 「한국일보」, 1993. 11. 2.

체 지도자들과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취해졌다.⁸⁾ 이와 함께 엘친 대통령은 군수산업의 민수화를 통해서 보다는 무기수출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외화를 획득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동 조치를 취한 것으로 分析된다.

반면, 엘친 대통령의 개혁정책에서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진 전, 무역수지의 흑자증대, 서방측의 경제지원 확대 등의 成果가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연방의 경제개혁에 있어서 비교적 만족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부문은 국영기업의 민영화 작업이다. 러시아연방 「國家統計委員會」(Goskom-stat)에 의하면 1993년 5월 말까지 총 68,000개(1992년도에 46,000개)의 기업이 사유화되었다. 이중 대규모 국영기업의 민영화율이 1992년 7%에서 1993년 1~5월 기간동안 15%로 증대하였고, 1993년 말까지 5,000개의 중·대기업을 민영화하려는 계획이 달성될 전망이다. 또한 액면가 10,000루블의 사유화증서 價値가 1993년초에 4,000루블에 불과하였으나 3/4분기에는 13,000루블로 상승되었다.⁹⁾

러시아연방정부는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1992년도 수출은 381억달러(1991년 대비 25% 감소), 수입은 350억달러(1991년 대비 21% 감소)로서 31억달러의 黑字를 기록

8)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15 November 1993, p. 36.

9)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Russia, 3rd quarter 1993*, p. 29.

하였으나 이는 1991년보다 33억달러 감소된 것이었다. 그러나 1993년도 상반기 수출은 182억달러(1992년도 同期 對比 3% 증가), 수입은 88억달러(1992년도 同期 對比 49% 감소)로서 무역수지 흑자가 이미 94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러시아연방 수출의 약 60%는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⁰⁾

미국 등 서방은 1992년말까지 러시아연방의 개혁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여 왔으나 자국의 국내경제 침체와 러시아의 정국 불안을 이유로 실제로는 적극적인 經濟支援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클린턴 미행정부는 전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옐친 대통령의 개혁을 경제적 측면에서 이전 정부들보다 더욱 지원하고 있고, 「서방선진 7개국」(G7)도 러시아연방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債權國 「파리클럽」은 구소련 외채중¹¹⁾ 1993년도 이자 및 원금 상환액 150억달러의 10년간 지불유예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국영기업의 민영화 진전, 무역수지의 흑자지속, 서방의 경제지원 확대 등과 같은 개혁정책의 부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연방은 전술된 산업생산 하락과 투자감소, 초인플레이, 토지사유화정책의 성과 미진 등 경제체제의 전환에 따르는 근본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短期間 내에 시장경제전환과 경제구

10)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Russia, 3rd quarter 1993*, p. 35.

11)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하면 구소련의 외채는 1992년말 현재 777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조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¹²⁾

이상을 綜合하여 볼 때, 러시아연방의 향후 정국에서는 강력한 대통령제를 기초로 하는 신헌법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엘친 대통령과 의회간의 첨예한 權力鬭爭이 예상되지는 않는다. 엘친 대통령은 시장경제로의 이행이라는 자신의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개혁속도와 폭을 필요에 따라서 조정하면서 개혁지지 세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2년간에 걸친 엘친 대통령의 개혁정책으로 경제부문에서 부분적인 成果가 나타나고 있는 바, 1994~1995년 기간중 러시아연방의 경제는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점진적으로 호전되어 1996년에는 엘친 대통령이 再執權하고 개혁파가 의회에서 다수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러시아연방의 정국은 안정국면에 들어서고 대외정책은 親西方 外交基調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가 현재보다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개혁지지 세력과 반개혁 세력간의 權力투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고 1996년 집권세력의 향방에 따라서 러시아연방의 대외정책 변화도 예상된다.

12) 마셜 골드먼(Marshall I. Goldman) 하바드 대학교 「러시아연구센터」 부소장은 러시아연방이 시장경제구조의 제도적 구축이라는 의미있는 개혁을 수행하기까지는 수 10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24~25, 1993, p. 4.

2. 리聯邦의 東北亞政策

러시아연방은 주권, 독립, 영토보전 등 기본적 국가이익의 확보, 안보강화, 자유민주주의국가로의 전환, 강대국 지위 유지와 시장경제로의 전환 및 세계공동체로의 편입을 위한 유리한 여건조성을 對外政策 目標로 삼고 있다.¹³⁾ 러시아연방의 동북아 정책은 이러한 대외정책 목표와 동북아 정세에 대한 認識으로부터 추진될 것인 바, 러시아연방은 동북아지역에서 상이한 국가간의 정치적, 전략적, 경제적 제반관계가 상호의존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자국이 지역국가들과 선린관계를 유지하고 역내 경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특히 초강대국간의 냉전종식과 미국의 역내 군사력 감축계획, 일반적으로 방어적이며 억제 지향적인 역내국가들의 군사배치, 정치·경제면에서 역내국가들의 양자관계 발전 및 일본의 대러 관계개선 모색 등을 肯定的으로 평가하고 있다.¹⁴⁾

그러나 러시아연방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기초로 역내에서 지도적 역할을 견지하려는 미국의 동북아정책, 일본의 역내 영향력 증대, 중국과 국익의 대립 가능성, 한반도 상황의 불안정, 역내의 영토분쟁 가능성, 역내 경제관계의 불균형 등을 憂慮하

13) "Russia's Foreign Policy Concept," *International Affairs* (Moscow, 1. 1993), p. 14.

14) Alexander Kislov, "Russia and Northeast Asia,"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X X III, no. 4 (Winter 1992), pp. 533~36.

고 있다.¹⁵⁾

동북아정세와 관련, 상기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러시아연방은 역내에서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고 역내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아·태국가로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들을 推進하고 있다.

가. 유리한 安保環境 造成

러시아연방은 현재 추진중인 국내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변상황의 안정을 필요로 하고 있는 바, 강대국들의 利害가 교차되고 있는 동북아지역에서 자국에 유리한 안보 환경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미국이 동북아지역에서의 군사감축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을 개선하고 한·일 등 동맹국들의 군사잠재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역내에서 지도적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역내에서 미국의 주요 정치·군사동맹국인 일본이 군사력을 점차 강화하고 있으며 包括的인 안보개념에 따라서 장기정책 목표를 21세기에 아·태 및 동북아지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강대국으로의 발전에 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연방은 중국의 2가지 외교 정책 목표를 경제·군사 현대화를 위한 유리한 대외적 환경조성

15) Viktor Stefashin, "Scenarios: Development of the Military-Political Situation in the Far East," *Far Eastern Affairs*, no. 2, 1992, pp. 67~77.

과 역내 영향력 提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989년의 관계정상화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국익대립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러시아연방은 남북한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나 상호불신과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중국의 러시아 영토에 대한 주장, 일본의 북방영토 반환 요구, 일·중간 센카쿠열도 문제, 한·일간 독도문제 등으로 인한 역내에서의 領土紛爭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¹⁶⁾

이러한 背景下에서 러시아연방은 자국에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에서 국가간 무력충돌이나 분쟁을 방지하고 미·일·중¹⁷⁾·남북한 등 역내국가들과 선린우호관계를 확대하는 한편, 일·중의 역내 영향력 증대나 지역패권국가 등장을 牽制하려 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연방은 신국제질서에서 군의 역할과 목표를 최초로 규정한 「신군사독트린」을 1993년 11월 2일 채택하고 機動軍 창설을 중요정책으로 삼고 있는 바, 기동군을 통하여 지역분쟁에 신속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¹⁸⁾ 이와 함께 러시아연방은 세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변화와 도전들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16) Viktor Stefashin, "Scenarios: Development of the Military-Political Situation in the Far East," pp. 67~72.

17) 최근 중·러 양국간에 가장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군사면으로써 러시아연방 태평양함대 소속 함정 3척이 1993. 8. 23~27 기간동안 1956년 이후 최초로 중국을 공식방문하였고, 양국 국방장관은 군사 및 기술분야에서의 협력, 상호교환방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사협력협정」을 1993년 11월 11일 체결하였다.

18) 러시아연방의 신군사독트린에 관해서는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4 November 1993, pp. 34~43 참조.

역내국가들이 단순한 「平和共存」(peaceful co-existence) 상태를 초월하여 「平和的 共同發展」(peaceful co-development)을 위한 효과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⁹⁾ 러시아연방의 이러한 입장은 지역차원의 광범위한 협력을 기초로 역내에 多者間 安保協議體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나. 域內國家들과의 經協 強化

러시아연방은 국내경제난 극복,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개발, 아·태 경제공동체로의 편입 등을 위하여 동북아 역내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중요시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현재 심각한 經濟難에 직면하여 있으면서 동시에 구소련 공화국들의 분리·독립으로 소련경제 잠재력의 약 70%만을 계승하게 되었다. 따라서 러시아연방은 경제난 극복과 경제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대외무역 관계를 활성화하고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경제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할 급박한 狀況에 있는 바, 동북아 역내국가들의 경제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군축을 통한 평화외교와 함께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수행하고 있다.

對外貿易面에서, 러시아연방은 수출경쟁력 제고와 수입대체 생산물의 증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질이 낮은 자국 천연 자원에 대한 일본 국내시장의 수요감소로 대일 무역량이 축소

19) Alexander Kislov, "Russia and Northeast Asia," p. 544.

됨에 따라서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확대하고 있다.²⁰⁾ 또한 러시아연방은 한국 및 대만과의 무역·경제관계 발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바, 이는 한국과 대만이 러시아의 천연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러시아 극동지역이 양국의 자본재와 소비재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연방은 자국의 경제발전에 특히 極東地域을 중요시하고 있으나 이 지역이 전인구의 5.4%, 전공업생산의 4%, 전농업생산의 3%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발전을 위하여 주요 정책목표를 경제구조 개편과 기술 및 대규모 투자 유치 등 대외경제관계 발전에 두고 있다. 經濟構造 改編과 관련, 러시아연방은 무역·경제·과학·기술면에서 외국과의 협력, 수출품과 수입대체품의 생산증진, 관광사업 유치 등 다목적을 위하여 이미 1990년 나홋카에 처음으로 「自由經濟地域」을 설치한 바 있으며, 이러한 「자유경제지역」을 블라디보스톡과 카산스키 등에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²¹⁾ 外國企業의 投資誘致와 관련, 러시아연방은 미, 일, 한 등 자본주의국가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있고, 삼림 등 천연자원 개발과 건설분야에

20) 중·러 양국간의 국경무역은 1993년 6월말 현재 전년도 동기간 대비 83% 증가되었고, 양국은 1995년까지 100억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교역량에 대비, 수송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철도 및 해상화물 수송부문에서의 협력에 1993년 8월 10일 합의하였다. 「모스크바방송」, 1993. 8. 1; 「한국경제신문」, 1993. 8. 14.

21) Lyudmila A. Anosova, "East Siberia and the Russian Far East: The Field for Russian-Korean Long-Term Cooperation," a paper presented at the Fifth ISSS-IFES Joint Conference, Seoul, Hotel President (October 13~14, 1992), pp. 13~25.

중국과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연방은 자국경제의 자본주의권으로의 編入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아·태 경제협력체」(APEC), 「아시아 개발은행」(ADB) 등 아·태 경제공동체로의 편입을 모색하고 있으며, 「유엔개발기구」(UNDP)의 지원하에 추진되고 있는 「두만강 개발계획」이 자국 극동지역의 아·태 경제권으로의 편입을 위한 중요한 措置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 亞·太國家로서의 位相確立

구소련은 막강한 군사력을 기초로 동북아를 비롯한 아·태지역에서 자국의 지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러시아연방은 과거 군사력 중심의 정책에서 경제와 공존외교 중심의 정책으로 轉換하여 아·태국가로서 장차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정치·군사·경제의 제반사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위확립을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냉전시대의 양극체제가 다극체제로 변화됨에 따라서 미국 이외에 독일을 중심으로 한 서구, 일, 중 등 지역 강국들이 국제무대의 주요한 行爲者로 등장하고 있으며, 세계적 차원에서 일정한 지위와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자국도 대내적 불안정을 극복하고 대외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한다면 장차 국제무대에서 주요한 행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判斷하고 있다.²²⁾

22) Alexei Arbatov, "Empire or great Power ?" *New Times*, 1993. 1, p. 24.

1992년말에 발표된 러시아연방 외무성의 「對外政策 最終文書」에 의하면 동북아지역에서의 자국위상과 관련하여, 러시아 연방은 세계 정치·경제의 중심지로 신속히 전환되고 있는 아·태지역을 자국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看倣하고 있다.²³⁾ 이러한 배경하에서 러시아연방은 세계정치·경제의 중심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역내국가간의 상호관계가 활발히 그리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아·태지역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제적·지정학적 이해를 확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자국의 位相을 확립하려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러시아연방의 동북아정세에 대한 인식과 동북아 정책을 종합하여 볼 때, 러시아연방은 향후 자국의 경제이익과 안보이해간의 均衡을 유지하면서 아·태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정학적 상황의 발전에 따라서 유연하고 실용적인 東北亞政策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3. 러聯邦의 對韓半島政策

국제적인 脫冷戰 추세는 동북아질서 재편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정세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개방압력이라는 대외환경과 대내 경제난²⁴⁾에 직면하게 된

23)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2 December 1992, p. 4.

24) 북한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1990년 -3.7%, 1991년 -5.2%, 1992년 -5.0%로 평가되고 있다.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South Korea North Korea, 3rd quarter 1993* (London: EIU, 1993), p. 6.

북한은 이러한 危機를 극복하고 체제를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1991년 가을, 한국과 유엔에 동시가입하고 동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여 대남정책에 유연성을 보였다. 이에 따라서 남북한은 1992년 9월 15~18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8차·南北高位級會談에서 정치, 군사, 교류협력에 관한 3개의 부속합의서를 일괄 타결하고 이의 실천기구인 화해, 군사, 경제, 사회문화 4개 공동위원회를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남북한간 화해협력이 「실천단계」로 진입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 통치이념의 차원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주체사상으로 완전히 대체, 「우리식 사회주의」의 이념적 위상을 정립하고 있고 체제자체의 矛盾으로 경제난에 직면하여 있다. 또한 북한은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북한은 헌법개정과 제도정비를 통해서 체제유지와 김정일으로의 권력이양을 공고히 하는²⁵⁾ 한편, 한·미 양국의 1993년도 「팀스피리트」 군사훈련 재개결정을 구실로 한국과의 고위급회담을 中斷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체제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또한 대미·대일 수교를 위한 협상 「카드」 활용의 목적으로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바, 이를 沮止하기 위한 국제사회

25) 북한의 권력세습 작업은 1991년 12월 김정일의 인민군 최고사령관 취임, 1992년 4월 공화국 원수칭호 수여, 1993년 4월 국방위원장 취임 등으로 수행되어 왔다.

의 노력이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대내적으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지속하면서 대외적으로 한반도 주변4강과의 국교수립을 완성하고 한·중, 한·러, 한·미, 한·일 등 일련의 頂上會談을 통하여 상호간 정치·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은 교역량 세계 13위, 「국민총생산」(GNP) 규모 세계 15위의 경제력을 기초로 국력과 위상에 상응하는 國際的 役割을 수행하려 하고 있다. 특히, 1993년 2월 출범한 김영삼 대통령 정부는 세계화, 다변화, 다원화, 지역협력, 미래지향을 「新外交의 5大 基調」²⁶⁾로 확정하고, 동북아 및 아·태지역에서의 경제정책 목표를 ① 역내국가들과의 양자 및 다자관계 확대와 강화, ②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위치에 있는 국가로서 경제발전 경험과 기술의 이전에 두고 있다.²⁷⁾ 이와 함께 1990년 이래 지속되고 있는 무역적자가²⁸⁾ 경공업제품과 중화학제품의 수출증가로 1994년도에는 약 5억달러의 무역흑자로 반전될 것으로 豫想되고 있다.²⁹⁾

上記와 같은 한반도정세와 관련, 러시아연방은 현재 한국에

26) 한승주, “한국 신외교의 기초 - 세계와 미래지향의 신한국 외교 -,” 외교협회 주최 오찬회 연설문 (1993. 5. 31).

27) 김영삼, “태평양 시대와 한국의 「신외교」,” 「공보」, 제26차 태평양 경제협의회 (PBEC) 총회 연설문 (1993. 5. 24), p. 9.

28) 한국의 무역적자는 1990년 48억달러, 1991년 96억달러, 1992년 52억달러를 기록하였다.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South Korea North Korea, 3rd quarter 1993*, p. 4.

29) 「한국일보」, 1993. 12. 7.

편향된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기조로 남북한간의 평화공존, 한국 중심의 경협증대, 한반도 비핵화 및 군축을 위한 정책을推進하고 있으며, 한반도통일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지지하고 있다.

가. 南北韓間의 平和共存

러시아연방은 현재 냉전체제의 산물로 성립된 남북한이 과거 40년 동안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 남북한 관계를 현실에 맞게 변화시키고 있는 바, 특히 戰略的 유연성과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외교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모스크바 라디오방송은 1992년 7월 6일 “러시아는 남북한에 적극적이고 균형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³⁰⁾라고 밝힌 바 있으며, 게오르기 톨로라야 (Georgiy Toloraya) 러시아연방 외무성 한국과장도 “러시아연방이 탈이념화된 외교정책을 기초로 남북한과의 정상적인 관계유지를 추구하고 있다”³¹⁾고 말하였다.

러시아연방의 이러한 南北韓 等距離外交는 첫째, 북한이 단기적으로 동구에서와 같은 근본적인 대내적 정치변화를 겪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³²⁾ 둘째, 강대국들의 이해가 교차되고 있고

30)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8 July 1992, p. 26.

31)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2 September 1992, p. 9.

32) 러시아연방의 극동외교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스크바 동방학연구소」의 겐나디 추프린 부소장과 「모스크바 극동문제연구소」의 트카첸코 한국부장이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Gennady Chufirin, “Russian Policy

남북한간의 적대감과 불신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는 한반도를 자국 안보에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 세계, 구소련의 붕괴로 弱화된 남북한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회복하고 확대하려는 의도 등에 기초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연방은 이렇게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대한반도정책의 기조로 삼고 한반도 안정을 위한 남북한간의 평화공존 상태를 자국 利害에 직결시키고 있다. 특히 파노프 주한 前 러시아연방 대사는 미 군사주간지 「디펜스 뉴스」(Defence News)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주한미군을 동북아지역 안정을 위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³³⁾고 밝혔는 바, 이는 러시아연방이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위하여 미군의 한국주둔을 容認하는 최초의 공식발언이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러시아연방은 국내개혁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반도에서의 돌발사태로 인한 東北亞 勢力均衡의 급작스런 변화를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간의 평화공존 유지를 위해서는 미군의 지속적인 한국주둔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towards the DPRK: Goals and Uncertainties,” 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our Major Powers’ Policies toward the DPRK by The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eptember 30, 1992), p. 8; Vadim Tkachenko, “러연방의 대북한정책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세미나 (1993. 11. 25).

33) *Defence News*, January 25~31, 1993, p. 38.

것으로 評價된다.

나. 韓國 中心의 經協增大

러시아연방과 북한의 경제관계는 양국 정치관계의 불확실성과 경제난으로 지난 2년간 약화되었고,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한 가까운 장래에 확대·발전되지 않을 展望이다. 따라서 러시아연방은 경제적으로 급속히 성장한 한국을 무역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상대국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을 위하여 한국의 투자와 차관 및 산업·농업분야 開發 經驗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구소련의 대한민국 貿易量은 1987~91년 기간동안 연평균 62.2%의 높은 신장을 보여왔다. 1992년에는 구소련의 붕괴로 인한 러시아연방의 대외지불 능력약화와 한국의 구소련 차관문제 때문에 러시아연방의 대한민국 무역량이 전년도 대비 28.5% 감소하였으나, 1993년 상반기에 6억 7,800만달러에 이르고 있어 1991년 동기의 수준을 維持하고 있다.³⁴⁾ 또한 한·러 양국은 무역확대와 교역품목의 다양화를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무역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러시아연방이 한국과의 경험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자국경제 발전을 위한 한국정부와 기업의 投資이다. 1993년 현재 러시아연방과

3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지역경제」 (1993.8), p. 199.

「독립국가연합」(CIS)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27건, 약 2,770만 달러로서³⁵⁾ 타국에 비하여 소규모에 머물러 있으나, 한국은 러시아연방의 정치 및 경제상황이 안정되면 대러 투자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1990년 9월 한·소수교 직후 30억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대소 경협차관 제공이 양국간에 승意된 바 있다. 현재까지 14억 7천만달러에 상당하는 현금 및 소비재 차관이 제공되었으나 러시아연방측이 이자와 원금에 대하여 현물 또는 현금상환을 거부하고 무기에 의한 대체상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구소 경협차관 문제가 양국간 최대의懸案으로 남아 있다. 또한 러시아연방은 자국의 첨단기술을 한국에 제공하고 한국의 생산기술과 경제개발 경험을 翫得하려 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 비군사 첨단기술분야의 러시아연방 과학자 200명이 한국에 파견되어 연구기관과 기업체에서 활동중에 있다.

다. 韓半島 非核化 및 軍縮

러시아연방은 구소련과 마찬가지로 접경지역에 핵이 없는 상황을 국익과 연결시키고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위해 한반도 非核化政策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한간 군사대치의 해소와 무기감축 및 한반도 신뢰구축 문제에 유럽내 핵 및 재래식무기 감축협상 경험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3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지역경제」(1993. 8), p. 184.

한국정부는 남북대화를 진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1991년 11월 8일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하고,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철수시켜 12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의 特別聲明을 통해 한국내에 핵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12월 31일 남북한간에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되었고, 북한은 1992년 1월 31일 「핵안전협정」을 署名하였다. 러시아연방은 남북한간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한반도 비핵화정책에 대한 중대한 진전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핵개발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確認하려 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연방은 현재 한반도에서의 군축과 군비통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에서 緊張緩和를 위한 군축과 관련, 러시아연방은 남북한이 장차 군사훈련에 참관단 초청,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중단, 군사문제에 대한 상호정보교환 등의 조치들을 통해 병력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연방은 남북한간 군사대치의 해소와 무기감축 및 한반도 신뢰구축 문제에 유럽내 핵 및 재래식무기 감축협상 경험의 적용 가능성을 檢討하고 있다.³⁶⁾ 또한 러시아연방은 양자간 및 다자간 선린우호관계 강화와 경제·문화·학술면에서의 협력

36) 브로니스라브 오멜리체프(CIS 군총사령부 제1참모차장), “군축협상의 경험과 한반도에서의 적용가능성,” (북한연구소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공동주최 한반도 군축 4개국 학술회의 발표논문, 1992. 6. 1), p. 6.

확대를 통하여 미·일·중·러·남북한이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의 구성을 주장하고 있는 바,³⁷⁾ 이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미 군사 긴장완화 유도, 일본 및 중국의 군사력 증대 견제, 역내 안보위협 제거 및 자국 영향력의 증대 이외에도 한반도에서의 분쟁방지를 위한 남북한간 軍縮誘導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平和的인 韓半島統一 支持

러시아연방은 현재 남북대화를 지지하고 있으며 한반도문제의 정의롭고, 평화적이며, 민주적인 해결을 希望하고 있는 바, 남북한간에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되고 남북대화가 진전되자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³⁸⁾ 특히 러시아연방은 통일한국이 아·태지역의 정치·경제적 강국으로 浮上하더라도 자국에 우호적인 국가가 되는 경우에는 극동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한반도통일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³⁹⁾

37) 엘친 대통령은 방한시 국회연설(1992.11.19)에서 분쟁방지를 위한 「아·태지역 안보협의체」의 준비단계로서 동북아국가간의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제의한 바 있으며, 파노프 주한 전 러시아연방 대사도 역내 안보문제에 관한 논의와 의견교환을 위한 메카니즘의 창출을 주장하였다. *The Korea Herald*, November 20, 1992; *Defense News*, January 25~31, 1993, p. 38.

38) 특히 러시아연방은 한반도에서의 이러한 급변이 미국의 핵무기 철수, 「타임스피리트」 훈련연기, 미군의 감축준비 등 군사·정치상황 변화로부터 발생되었다고 평가하였다.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5 February 1992, p. 38.

39) Vadim P. Tkachenko,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Korea and the Russian Position," a paper prepared for the Fifth ISSS-IFES Joint Conference, Seoul, Hotel President, October 13~14, 1992, pp. 7 & 11 참조.

그러나 러시아연방은 前述한 바와 같이 가까운 장래에 북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거나 붕괴되리라고는 전망하지 않고 있으며 남북한간의 지속적인 접촉에도 불구하고 반세기 동안 지속된 상호불신이 대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통일을 먼 장래의 일로 간주하고 있다.⁴⁰⁾ 따라서 러시아연방은 남북한이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을 존중하고 남북대화에 진지하게 임할 것을 促求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통일준비를 위하여 북한과 대화를 지속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한반도통일 方式과 관련, 러시아연방은 기본적으로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닌 남북한 직접대화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고 있으나,⁴¹⁾ 평화적 통일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 않다. 러시아연방의 일부에서는 경제력이 우세한 한국주도의 독일식 吸收統一방식을 현재 한반도통일의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있다.⁴²⁾ 그러나 또 다른 일부에서는 독일식 흡수통일의 경우 한국이 현재의 경제역량과 성장률로는 흡수통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40) Vladimir Miasnikov, "Russia in the New Concert of East Asian Powers," a paper prepared fo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New Asian-Pacific Era and Korea"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August 20~21, 1992, Seoul, Korea, p.18.

41) 쿠나제 신임 주한 러시아연방 대사의 모스크바 한국특파원들과의 기자회견 내용 참조, 「조선일보」, 1993. 12. 18.

42) *Rossiyskaya Gazeta*, 1991. 12. 27.

점, 남북한 주민간의 단순한 문화적 異質性이 경제적 투쟁관계로까지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북한에 흡수통일을 반대하는 보수세력들의 무장계렬라 거점이 형성되어 남북한간 유혈사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排除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경고하고 있다.⁴³⁾

반면,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문제연구소」의 미아시니코프 같은 학자는 한반도통일이 무력에 의한 베트남식 통일이나 독일식 흡수통일과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⁴⁴⁾ 이러한 見解는 그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한반도통일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 러시아 연방내 다수의 한반도문제 專門家들도 한국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중간단계로서 「남북연합」이 1999~2001年頃에 수립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고려민주연방제」식의 統合도 같은 시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⁴⁵⁾

43) 김명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의 한국학 전문가 30명이 본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환경 전망,” 「통일한국」, 통권 제120호 (1993. 12), p. 80.

44) V. Miasnikov, “Russia in the New Concert of East Asian Powers,” p. 18.

45) 김명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의...,” p. 80.

第Ⅲ章 러시아聯邦의 對北韓 認識 및 政策

1. 對北韓 認識의 變化

1985년 3월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집권하기 이전까지 구소련은 북한지역을 韓半島 共産化를 위한 전진기지 또는 극동지역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을 견제하고 아·태지역으로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 삼기 위하여 북한과 이념·정치·군사·경제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고르바초프는 軍事費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인한 경제악화와 이에 따른 체제위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국가들과의 이념대립과 제3세계에 대한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보다는 대화와 신뢰구축을 강조하는 「新思考」外交를 표방하였다. 대한반도정책과 관련, 고르바초프는 1986년 7월 블라디보스톡 연설에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전한국민의 민족문제 해결 가능성을 시사하고⁴⁶⁾ 對南北韓 等距離外交를 적극화하였다.

고르바초프는 1988년 9월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에서 한국과의 경제관계 개선 가능성을 밝히는 한편,⁴⁷⁾ 「88 서울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기존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대한국정책을 再評價하고 한국의 자본과 기술 유치, 동북아에서 미국 견제를 통

46) *Rede von Michail Gorbatschow in Wladiwostok 28. Juli 1986* (Moskau: APN-Verlag, 1986), p. 42.

47) "Aussenpolitische Ausfuehrungen Michail Gorbatschows in Krasnojarsk," *Sowjetunion Heute*, Nr. 10 (Oktober 1988), Dokumente p. V.

한 전략적 우위 확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한국과의 국교정상화와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지지 등을 통하여 대한국관계를 강화하였다.

고르바초프 시대에 소련과 북한의 관계도 1990년 9월 한·소 국교정상화 때까지는 현저하게 발전되어 각 분야에서의 협력이 증대되었다. 양국간 고위인사들의 상호방문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고르바초프는 자신의 블라디보스톡 선언에서 한반도에 핵무기자유지대 창설에 관한 북한 제안의 실현을 촉구하였다.⁴⁸⁾ 1986년 10월 김일성은 1984년 5월에 이어 다시 모스크바를 방문했으며, 소련은 軍事面에서 MIG-23 전투기, T-72형 전차, 첨단장비의 유도미사일, 대형 헬리콥터 등의 최신무기를 북한에 제공하는 댓가로 북한영공의 군사적 이용권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구소련의 대북한정책 목표는 1986년 1월 세바르드나제 외상의 訪北時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양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제국'의 군사적 우위달성 노력, 극동에서 미국의 군비증강, 일본의 군국주의적 경향증대, 한국의 핵기지화, 미·일·한국간 「NATO형의 신군사정치동맹 창설의 시도」를 맹렬히 非難하였다. 공동성명은 또한 고려연방공화국의 창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남북한에 의한 불가침선언, 서울 올림픽의 남북한 공동개최 등의 북한제안을 지지하고 4強에 의한 남북한의 교차승인이

48) Rede von Michail Gorbatschow in Wladiwostok 28. Juli 1986, p. 42.

나 유엔에의 동시가입 또는 분리가입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⁴⁹⁾ 구소련이 이와 같이 적극적인 대북한정책을 수행한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 때문이었던 것으로 分析된다. 첫째, 소련은 레이건 대통령의 미국 극동군사력 강화와 한·미, 미·일의 전략적 협력강화가 자국의 극동안보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중국이 정치·경제면에서 한국에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은 이에 對應하는 조치로 대북한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셋째, 소련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극동에서의 군사적 行動半徑을 확대하려 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연방은 현재 대내적으로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확립하였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연방은 前述한 바와 같이 동북아시아에서는 유리한 안보환경 조성과 역내국가들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도모하면서 長期的으로는 태평양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러시아연방은 냉전이후시대를 맞이하여 자국의 전략적,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대북한관계를 현실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바, 러시아연방의 대북한 認識變化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49) 우아 후미오, “고르바초프時代의 蘇聯의 韓半島政策,” 金達中 編, 「蘇聯의 亞細亞政策과 韓半島」, pp. 213~14.

다. 理念面에서, 러시아연방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확립을 국가 이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사회주의 연대성이 斷絶되었다. 政治面에서, 러시아연방은 구소련의 붕괴로 야기된 동북아지역의 세력공백에 따른 지역불안을 우려하고 있으며 국내 개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정세의 안정을 중시하고 있는 바,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외교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軍事面에서, 러시아연방은 냉전이후시대를 맞이하여 1961년 소·북간 체결된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제1조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經濟面에서, 경제난에 직면해 있는 러시아연방은 더 이상 북한에 경제원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북한보다는 한국과 경협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이와 같이 變化된 인식을 기초로 대북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對北韓政策

러시아연방은 현재 기존의 동맹관계를 우호관계로 전환하고 약화된 경제관계를 정상화하며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대북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하여 인권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가. 同盟關係로부터 友好關係로의 轉換

구소련은 냉전체제하에서 사회주의 연대성과 1961년의 동맹 조약을 기초로 북한과의 이념적, 군사적 유대관계를 중시하는 정책을 遂行하면서 북한정권에 정치, 군사,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대내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위한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脫理念的 외교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러시아연방은 과거의 이념적, 군사적 특수관계를 배제하고 우호관계에 기초된 대북한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구소련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기초하여 대북한관계를 유지하여 왔는 바, 이는 북한정권이 구소련의 이념적 팽창정책과 군사적,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수립·유지되어 왔기 때문이었다. 또한 구소련은 동서진영간의 冷戰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극동지역 자국 안보의 강화, 중·소분쟁에 직면하여 북한의 중국편향 방지,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강화 등의 목적을 가지고 북한과 1961년 7월 6일 일종의 同盟條約인 「조·소간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동조약 제1조는 양국중 일국이 제3국의 침략을 받는 경우 타국은 즉각적으로 개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條項들은 양국간 정치·경제·문화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규정들이다.⁵⁰⁾

50) 조약문은 Institut Vostokovedeniya Akademii Nauk SSSR, *Otnosheniya Sovetskogo Soyuza s narodnoy Koreey 1945-1980, Dokumenty i Materialy* (Moskva: Izdatelstvo Nauka, 1981), pp. 196~98.

러시아연방 외무성은 1991년 12월 구소련의 해체 직후 대북 한정책과 관련, 북한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같은 幻想에서 깨어나야 하며, 소련의 해체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961년의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이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최초로 밝혔다. 특히 러시아연방 외무성은 동조약의 제1조 규정을 수정하거나 廢棄할 것을 시사하였는 바, 이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존속되는 경우 러시아가 한반도에서의 군사분쟁에 항상 휘말릴 소지가 있으며 대미·대한 신뢰구축에 장애가 될 수 있고, 한국과 제반관계의 확대를 위한 선린우호협력조약의 체결이 절박하다는 러시아연방측의 認識 때문이었다.⁵¹⁾

그러나 현재 북한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기본적인 입장은 “47년 동안 제분야에서 계속되어온 모스크바와 평양이 이념적 차이로 관계를 축소하거나 단절하는 것은 러시아연방의 대외정책 목표에 反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국은 과거에 이룩한 긍정적인 성과와 선린관계를 강화·발전시켜야 한다”⁵²⁾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연방은 냉전종식과 한반도에서 남북대화의 진전을 포함한 現 國際的 현실하에서 1961년 조약의 군사관련 규정이 실효성을 상실하였으나 정치, 경제, 문화협력에 관한 규정들은

51) *Daily Report: Soviet Union*, 24 December 1991, pp. 6~7.

52) Alexander Z. Zhebin, “Russian-North Korean Relations: Present and Future,” a paper prepared for the Fifth ISSS-IFES Joint Conference, Seoul, Hotel President, October 13~14, 1992, p. 29.

아직도 정당성을 갖고 있으며 양국관계의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看做하고 있다.⁵³⁾

이러한 배경에서 로가초프 옐친 대통령 특사는 1992년 1월 평양 방문시 1961년 조약의 유지조건으로 무력불사용과 國際 規範 준수를 북한측에 요구한 바 있으며, 러시아연방은 체제를 달리하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과거와 같은 대규모 군사원조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61년 條約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현재 입장은 동조약을 수정하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기는 하지만 러시아연방은 제1조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즉, 러시아연방은 “북한에 의하여 도발되지 않는 침략의 경우 동조항에 의거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한 약속 이행의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⁵⁴⁾

한국 국방부가 한때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폐기를 要求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동조항이 수정 또는 폐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남북대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현대 무기로 잘 武裝된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한·미 상호안보조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을 위하여 북한에 대한 공식적인 안전보장도 필요하다는 러시아연방의 인식때문이다.⁵⁵⁾ 有效期間 30년의 1961년 조약이 5년 더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약의 자동군사개입 조항에 대한 러시아연방

53)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4 March 1992, p. 26.

54) *Izvestiya*, 1992. 8. 13.

55) Alexander Z. Zhebin, “Russian-North Korean Relations: Present and Future,” pp. 24~25.

의 상기와 같은 재해석과 기타 규정들의 존속은 과거의 양국간 동맹관계가 시대상황의 변화로 退色하였기 때문에 러시아연방이 대북한정책을 냉전이후시대의 보편적 국가관계인 우호관계로 전환하였음을 意味한다.

그러나 1990년 9월 한·소수교를 계기로 급격히 냉각되기 시작한 러·북간의 실질적인 정치관계는 惡化된 상태에 있다. 모스크바 주재 북한 외교관 및 통상대표부 직원 수는 한때 140명을 상회했으나 현재는 60 여명으로 대폭 감소되었고 평양 주재 러시아연방 외교관은 25명 정도에 불과하다. 러시아연방은 평양 대사관 이외에 청진에 총영사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은 나호트카에 총영사관, 하바로프스크에 임업 대표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교류는 전반적으로 不振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국의 악화된 정치관계는 이외에도 김일성 부자세습체제에 대한 러시아연방 언론의 부정적인 시각, 관광중이던 러시아인들에 대한 남포 북한주민들의 구타사건(1993년 7월 4일)과 이로 인한 러시아연방 주재 북한 외교관들의 국내이동 제한 및 러시아연방 관리들과의 접촉통제 등을 통하여 可視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한때 膠着狀態를 보였던 러·북간의 군사관계는 회복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소련은 북한에 대한 무기 및 군수물자의 최대 공급국이었으나, 러시아연방은 대외군사원조 삭감방침과 무기현금판매 정책 때문에 공격용 첨단무기를 북한에 供給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다. 또한

1992년 3월에는 「독립국가연합」 통합군과 북한군간의 관계발전을 위한 긴급조치 계획문서가 조인되었으나 북한측은 1993년 7월말경 러시아연방 해군함정의 원산항 친선방문 提議를 거절한 바 있다.⁵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러시아연방은 경화획득을 위하여 북한에 대한 무기판매를 모색하고 있고, 북한은 무기구매를 통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거나 군수부품에 利用하려고 있다.

나. 經濟關係의 正常化 摸索

현재 러시아연방과 북한의 경제관계는 양국의 경제난으로 약화된 상태에 있다. 그러나 러시아연방은 향후 대북한관계가 相異한 이념때문에 정치·군사면에서 보다는 경제면에서 더 발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상호이익의 원칙에 기초하여 弱화된 경제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소련은 1980년대 말까지 북한의 주요한 경제파트너이었으나 소련자체의 경제난과 한·소수교 등의 영향으로 1991년부터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과 무역이 상당히 縮小되었다. 구소련의 대북한 무역은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 총 무역량의 1/2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1991년 소련측의 국제가격 수준 경화결제 요구 이후 급격히 減少하였다. 양국간 무역대금 결제는 1991년 부분적 경화결제가 시작되어 1992년부터 전면

56) 서현섭, “기획특집: 북한과 러시아의 어제와 오늘, 동맹관계에서 국가적 관계로 전환,” 「월간북한」, 통권 261호 (1993. 9), p. 76.

적 경화결제가 실시되었다.

<表 4> 舊소련/ CIS의 對北韓 貿易推移

(單位: 百萬달러)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수 출	1,186.5	1,391.4	1,921.7	1,641.1	1,667.9	858.0	227.0
수 입	642.0	682.7	887.3	890.7	1,047.4	563.0	65.0
총 액	1,828.5	2,074.1	2,809.0	2,531.8	2,715.3	1,421.0	292.0
%/북한 무역총액	55	51	56	55	57	40	12

出處: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Profile South Korea North Korea 1993/94* (London: EIU, 1993), pp. 73~74; 「한국일보」, 1993. 6. 4.

러시아연방 자체만의 1992년도 대북한 貿易額은 6억달러(북한 무역총액의 24%)로서 1991년도 대비 1억 3천만달러 증가하였으나 이는 교역량 증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산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과거 특별우대 가격에서 정상가격으로 상승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93년도 상반기 중의 러·북한 교역량은 2억 5천만달러로서 연말까지 약 5억달러 선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⁵⁷⁾ 러시아연방은 석유, 중유, 기계장비, 목재, 석탄, 비료를 북한에 수출하고⁵⁸⁾ 탄화칼슘, 탈크,

57) 서현섭, “기획특집: ...,” pp. 75~76.

58) 러시아연방은 1992년도에 2만 5천톤의 석유와 동량의 중유, 1억달러 이상의 기계장비, 약 80만 입방km의 목재, 30만톤 이상의 석탄, 약 5억톤의 비료를 수출하였다. 트카첸코, “러시아-북한관계의 변화와 양한관계 영향,” (한양대 중소연구소 세미나, 1993. 5. 24), 「주요자료 전문집」(연합통신, 1993. 6. 1), p. 108.

트랙터, 축전기 등을 북한으로부터 輸入하고 있는데 최근 러시아연방 시장에서는 일본과 다른 아시아국가들의 전자제품, 식품, 소비재가 북한제품을 몰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表 5>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990년도에 41만 톤에 달하였던 구소련의 대북한 원유공급량은 1991년도에 불과 4만톤, 1992년도에 3만톤이 각각 공급되었다. 이에 따라서 북한은 經濟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表 5> 舊소련/러聯邦으로부터 北韓의 原油 導入量

(單位: 千噸)

연 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도입량	885	800	640	506	410	40	30

出處: “최근 북한의 대중·러시아 경제관계 변화동향,” 「국제문제」, 제24권, 제7호 (1993. 7), p. 133.

러시아연방과 북한의 합작투자는 7건, 269억 9천만루블에 달하고 있으나,⁵⁹⁾ 최근 상호불신과 내부압력으로 葛藤을 겪고 있고 선반제작 및 유색철광 개발 등 대북한 합작기업의 설립은 중단된 상태에 있다.

러시아연방은 이와 같이 약화된 경제관계에도 불구하고 상호이익의 원칙에 기초하여 북한과의 무역과 경제협력을 正常化하는 한편, 구소련에 대한 북한의 부채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59)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19 June 1992, p. 36.

러시아연방은 대북한 경제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쌍방간 수출품의 공급지속, 구소련의 支援으로 북한에 계획되었던 산업시설의 건설완료, 러시아연방의 원자재로 북한에서 대량 생산된 소비재의 수입, 합작투자의 확대, 러시아 극동지역에 북한 노동력의 이용 등과 같은 협력에 利害를 갖고 있다.⁶⁰⁾ 이에 따라서 러시아연방은 1992년 7월 북한과 남북한 관통 시베리아 가스관 부설에 관한 정부간 문서에 합의 서명한 바가 있으며, 1993년 8월 13일 북한의 나진항을 한국, 일본, 동남아로 연결되는 국제무역항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진항 開發에는 러시아연방측이 1차로 200~300만달러의 현금을 투자하고 북한측은 하역, 창고, 부두시설을 현물출자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러시아연방은 대북투자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북한과 투자보장, 관세협력, 이중과세방지의 3대협정을 체결할 豫定이다.⁶¹⁾

또한 러시아연방은 구소련에 대한 북한의 부채 33억루블 환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바, 양국간 경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어떠한 형태로든지 북한측의 償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1991년에 2억 900만루블을 상환하였으나 1992년에는 13억루블의 부채를 상환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양국간에는 1993년에 10억루블 이상을 물품으로 辨濟하기로 합

60) Alexander Z. Zhebin, "Russian-North Korean Relations: Present and Future," p. 28.

61) 「한국경제신문」, 1993. 8. 16.

의가 되어 있다.⁶²⁾

이와 함께 러시아연방은 연해주와 사할린 섬에서 진행중인 自由經濟地域 창설계획이 성공한다면 북한과의 경제와 무역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것이고, 「독립국가연합」의 한인공동체가 계획중인 러시아 극동지역의 한인자유경제지대 創設에 북한의 노동력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이 참여하고 있는 두만강유역 개발계획과 관련, 러시아연방의 21개 기업들은 나진-선봉지구 하부구조 개발을 위하여 1억달러를 投資하는 계약을 1993년 9월 북한과 체결한 바 있다.⁶³⁾

다. 核開發 沮止

북한은 현재 영변에 2기, 함남 신포에 1기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변에 또 다른 1기의 원자로를 建設中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변 소재의 최초 원자로는 구소련의 원조로 1965년 완공된 것으로 순수 연구용이며, 신포 소재 원자로는 발전용이다. 영변 소재의 다른 원자로는 1980년 초 북한 자체에 의하여 건설되어 1986년 가을 可動되었고, 최근에는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핵연료 재처리 시설이 건설중에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북한은 이 시설이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고속증식로 개발을 위한 것이며 핵무기 개발과는

62) 트카첸코, “러시아-북한관계의 변화와 양한관계 영향,” p. 108.

63) *Far Eastern Economic Review*, 30 September 1993, p. 72.

無關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통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해 낼 경우 핵무기 개발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은 현재 미국 등 서방측으로부터 핵개발 疑惑을 받고 있다.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바 있는 북한은 18개월 내에 「핵안전협정」을 체결토록 되어있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다가 1992년 1월 30일에 同協定에 서명하였고, 남북한 상호 핵사찰에 동의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북한은 1992년 5월부터 1993년 2월까지 6차에 걸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임시사찰을 받았으나 군사목적으로 核開發을 하고 있다고 예측되는 평양 부근의 2개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거부하고 3월 12일 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핵개발 의혹을 더욱 增幅시켰다. 다행히도 북한은 NPT 탈퇴를 유보하고 미국과 고위급회담을 통하여 핵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핵개발 의도는 軍事·安保面에서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 유지 및 한·미 군사동맹관계를 기초로 한 한국의 군사력 억지, 政治面에서 김일성-김정일 세습체제의 강화, 外交面에서 핵협상을 통한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지원 유도 및 대미 수교 등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제3세계로의 핵확산 방지와 동북아정세 안정을 위하여 한반도 비핵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연방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다른 視角에서 보고 있는 바, 우리가 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연방은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의 인공위성이 북한의 핵 재처리 시설로 추측되는 영변의 대형 건설물을 발견하기 훨씬 이전, 즉 한국이 1970년대에 독자적인 핵개발을 시도하고 미국이 이를 抑制하기 위하여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시점으로부터 야기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연방은 한국으로부터 미국 전술핵무기의 철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평양측이 현재 갖고 있는 불안감이 나름대로 根據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첫째, 한국이 아직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둘째, 원자력공학의 수준, 확고한 연구층과 실험장비의 존재, 산업국가들과의 협력 상태로 보아 객관적으로 한국에서 핵이 출현할 전제조건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셋째, 미국전함이 한국의 기지나 항구에 입항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⁶⁴⁾

북한의 핵무기 개발 成功與否와 관련, 러시아연방은 북한이 자국에 매장되어 있는 우라늄 광물, 원자로, 일련의 실험실과 연구센터를 기초로 독자적인 핵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나 플루토늄 추출상의 문제로 핵무기 개발에 있어서 아직 들출구를 찾지 못했으며, 북한에는 아직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技術的 측면과 관련, 러시아연방은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어떠한 핵무기라도 제조할 능력이 있으며 문제는 단지 필요한 정치적 결정에 대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⁶⁵⁾

64) 트카첸코, “러시아-북한관계의 변화와 양한관계 영향,” pp. 103~104.

65) 트카첸코, “러시아-북한관계의 변화와 양한관계 영향,” p. 104.

러시아연방 국방부기관지 「크라스나야 즈베즈다」지는 1992년 7월 29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사실이라면 이는 북한이 미, 한, 일과의 대화에서 「카드」로 이용하려는 속셈으로 극히 危險한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⁶⁶⁾ 이러한 배경하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지역불안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러시아연방은 이를 저지하고 북한의 의외의 도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식적으로는 자국의 핵과학자와 핵연료 유출 방지를 위한 措置를 취하였다. 또한 러시아연방은 북한이 IAEA의 사찰과 남북한간의 상호 핵사찰을 수락토록 하기 위하여 평양에 압력을 가하는 한편, 미국 등 서방과 공조체제를 維持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러시아연방의 대북한 압력과 관련, 로가초프 옐친 대통령 특사는 평양을 방문하여 1992.1.18 북한 외교부 제1부부장 姜錫柱와 회담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확산방지와 핵안전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모스크바 방송」은 6월 3일 한국측의 남북한 상호 핵사찰 주장이 타당하다고 강조하면서 남북한간의 신뢰 분위기 造成을 위해서도 평양측 핵대상들이 한국의 핵사찰원들에게 개방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옐친 대통령은 8·15 해방 47주년을 맞이하여 김일성에게 친서를 보내 남북한간의 관계개선과 핵무기 개발 중지를 촉구하는 러시아연방의 입장을 재차 強調하였다. 또한 러시아연방 외무부는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66) 「한국일보」, 1992. 7. 30.

NPT 탈퇴선언과 관련하여 북한의 NPT 잔류 및 조약상의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북한의 NPT 탈퇴유보 결정과 관련해서는 평양이 미·러 등 핵강대국의 설득과 압력을 받아들인 결과 올바른 決定을 내렸다고 평가하였다.⁶⁷⁾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國際共助體制와 관련, 하스블라토프 전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의장은 이미 1991년 12월 방한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며 러시아공화국이 이의 저지를 위한 국제외교 노력에 동참할 方針임을 밝힌 바 있다. 코지레프 러시아연방 외무장관도 1992년 3월 방한시 러시아연방이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협력하지 않을 것과 북한의 핵문제를 타국과 계속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유엔안보리를 포함한 國際機構를 이용할 계획임을 밝혔다.⁶⁸⁾ 특히 엘친 대통령은 6월 17일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측에 남북한간에 採擇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완전한 이행과 남북한 상호핵사찰 수용을 촉구하였고 이러한 입장은 11월 한·러정상회담에서도 再確認되었다.

또한 19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결정과 관련, 러시아연방은 커다란 우려를 표명하면서 미·영·불 등 핵관련 당사국들과 尙後 대응책을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미·영 등 NPT 기탁국과

67)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16 June 1993, p.12; 「조선일보」, 1993. 6. 15.

68) *Izvestiya*, 1992. 3. 21, p. 3.

함께 동월 18일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정부간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NPT 탈퇴철회를 促求하였다. 이와 함께 솔로비예프 아·태 총국장은 북한의 NPT 탈퇴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한, 미·러·중·일 6개국 緊急會談 개최를 제안하였다.⁶⁹⁾

북한의 NPT 탈퇴유보 선언 이후에도 러시아연방은 국제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바, 엘친 대통령은 10월 방일시 호소카와 일본총리와 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코지레프와 하타 양국 외무장관은 「한반도에 관한 러·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에 핵안전협정 遵守를 촉구하였다.

러시아연방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북한에 직접적으로 壓力을 가하는 한편, 미국 등 서방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NPT 조약의무 이행에 관한 북한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달성된 합의의 이행을 회피하고 있고 지금까지 북한과 IAEA와의 회담에는 肯定的인 결과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연방은 현재 진행중인 미·북간 핵협상이 남북대화에도 肯定的인 影響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⁷⁰⁾

현재까지 러시아연방의 基本立場은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러시아연방은 미·북간 핵협상에 아직 희망을 걸고 있으며, 양국간 협상이 진행중인 상태에

69) 「讀賣新聞」, 1993. 3. 18.

70) 「모스크바 방송」, 1993. 10. 14.

서 경제제재를 논의하는 경우 북한을 자극시킬 憂慮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연방은 어떠한 경우든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⁷¹⁾

라. 人權概念의 適用

러시아연방은 현재 민주주의, 인권, 국제안정 등 인류의 공동 가치에 기초하여 미국과 유럽 및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과 관계를 再定立하려 하고 있다.⁷²⁾ 이와 같이 보편적 국가관계에서 인권을 중시하고 있는 러시아연방은 1992년 1~3월 「제네바 인권문제 국제회의」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공식 거론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시베리아에 있는 북한 벌목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狀況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북한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인권개념 적용은 러시아가 사회주의국가로부터 인권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국가로 전환되었음을 대외적으로 誇示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를 국제문제로 간주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러·북간의 임업협정에 따라서 1967년 이후 약 15,000~20,000명의 북한 노동자가 하바로프스크, 아무르 등 13개 벌목장에서 목재 벌채작업에 종사하고 있다. 북한當局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혹독한 생활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의 탈주방지와 탈주

71) 쿠나제 신임 주한대사의 1993년 12월 17일 모스크바 주재 한국특파원들과의 기자회견 내용 참조. 「조선일보」, 1993. 12. 18.

72) *Izvestiya*, 1992. 3. 31.

기도자에 대한 재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사설감옥소를 설치, 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여 왔다. 러시아연방 당국의 현지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13개 북한 벌목장의 폐쇄와 러·북간 임업협정의 1993년 말 폐기가 1993년 7월 決定되었다. 러·북 양국은 새로운 임업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중이나, 러시아연방측이 국제인권 기준과 러시아 국내법 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은 현재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러시아연방은 모스크바 대학의 북한 留學生 김명세 씨에 대한 정치망명을 허용하는 한편, 1993년 10월 한국방문을 허용하였다.⁷³⁾

이와 같이 러시아연방은 현재 대북한정책에서 人類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이는 양국간 정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러·北關係 展望

엘친 대통령은 향후 의회내 극우민족주의와 공산주의 세력의 불만을 약화하고 개혁정책에 대한 무소속 의원 및 국민들의 支持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내적으로 개혁속도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외정책에서의 큰 변화는 豫想되지 않는 바, 러시아연방은 자국의 경제이익과 안보이해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실용적인 동북아정책을 수행할 것이고 이

73) 서현섭, “기획특집: …,” pp. 74~75.

러한 틀 속에서 러시아연방의 대북한정책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反面,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 김정일 권력 승계체제의 공고화, 경제난 극복을 위한 制限的 개방과 대미·대일 수교라는 목표를 가지고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향후 러·북관계는 정치·경제·군사면에서 다음과 같이 展開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면에서, 구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연방의 대북한관계 재조정 과정에서 이념적 요소가 제거됨에 따라서 러·북관계는 긴밀한 동맹관계로부터 우호관계로의 전환, 외교접촉 감소, 북한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핵개발 포기 압력과 인권개념의 적용 등으로 상당히 악화된 狀態에 있다. 양국의 이러한 정치관계는 단기간 내에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 않는 바, 이는 현재 러시아연방이 경제난 극복 등 자국의 국내문제 해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북한이 서방으로부터 경제지원을 誘導하고 사회주의체제와 김정일 세습체제를 인정받기 위하여 대러관계보다는 대미·대일관계 개선에 더 큰 比重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아시아정책을 점차 중시하고 있는 러시아연방은⁷⁴⁾ 유리한 안보환경 조성과 아·태국가로서의 위상확립이라는 東北亞政策과 관련하여, 정치적 접촉 정례화와 의회 및 정부 수준의 접촉 재개 등 북한과의 선린관계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 따

74) 러시아연방 외무부는 1994년부터 대아시아외교를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아·태 총국을 4국으로 분할하는 기구개편을 단행키로 하였다. 「중앙일보」, 1994. 1. 1

라서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고 미·북, 일·북간 수교가 이루어진 以後에는 러·북간 정치관계가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국익을 기초로 점진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발전의 폭과 속도는 일·중의 역내 영향력 증대 및 미·북과 일·북간 수교 이후 양자관계의 진전 정도 등에 의하여 影響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經濟面에서, 러시아연방은 동북아 역내국가들과의 경협강화라는 차원에서 북한과의 약화된 경제관계를 상호이익의 원칙을 기초로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북한도 경제의 상당한 부분이 러시아와 連繫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연방과의 안정된 무역·경제관계가 경제난 및 생활수준 하락의 극복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러·북 양국간에는 무역 및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협정 서명, 나진항 개발 합의 등의 進展이 이루어졌으나 양국의 경제난, 연료와 운송수단의 부족, 북한의 부채문제 미해결 등으로 양국간 경제관계도 短期間내에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연방의 경제가 회복되고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본격적으로 적극화 되어야 양국간 무역이 증대하고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및 두만강 유역 개발에 대한 양국간 경협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양국의 경제관계가 正常化될 때까지 러시아연방은 원자재와 부품을 공급하고 북한이 값싼 노동력을 이용 완제품을 供給하는 형태의 경협수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軍事面에서, 러시아연방과 북한간의 이념 및 동맹관계 청산,

1961년 조약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재해석 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연방은 강대국간의 이해가 교차되고 있어 정치·군사상황이 不安定한 동북아에서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러시아연방은 대북한관계의 斷絶이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서 자국의 안보전략체계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바,⁷⁵⁾ 극동지역의 안보유지를 위하여 북한과의 군사교류를 정상화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부품 공급을 持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러시아연방은 현재 군수산업의 민수화 촉진보다는 무기 판매 확대로 경화를 획득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軍備를 증강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무기판매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1961년 조약의 자동군사개입 條項은 수정이나 개정없이 당분간 유지되다가 1996년 예정인 조약 갱신시⁷⁶⁾ 전쟁조항의 새로운 해석에 관한 비망록이 양국간에 교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관련, 러시아연방은 한반도 비핵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의 핵무장 및 역내 핵경쟁 저지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현재의 핵기술과 핵연료 공급 중단정책을 持續하는 한편, 자국 핵과학자들이 북한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북간의 핵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러시아연방은 북한

75) *Daily Report: Soviet Union*, 24 December 1991, pp. 6~7.

76) 30년 유효의 1961년 조약은 5년 연장에 따라서 1996년에 갱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핵개발을 끝까지 비밀로 할 可能性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대북한 압력과 서방과의 공조체제 유지라는 기존의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第Ⅳ章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推進方向

1. 短期: 南北韓 平和共存의 現狀維持

러시아연방의 개혁현황과 동북아 및 대한반도정책, 대북한관계 현황을 종합하여 볼 때, 러시아연방은 향후 短期的으로 남북한 평화공존의 현상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치·경제·군사면에서 한국에 편향된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탈피하여 좀 더 균형된 등거리외교를 모색할 것으로 展望된다. 그러나 러·북 양국이 직면해 있는 경제난과 북한의 제한적 개방정책 때문에 단기간 내 양국간 경제관계 정상화는 어려울 것인 바, 러시아연방은 한국중심의 經協強化라는 기존의 정책을 지속하면서 동북아 역내에서 유리한 안보환경 조성과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남북한과 군사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연방은 국내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정세의 안정을 희망하고 있고, 이미 敍述된 바와 같이 가까운 장래에 북한정권이 근본적인 변혁을 겪거나 붕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김정일 승계체제와 관련, 쿠나제 新任 駐韓大使는 1993년 12월 17일 모스크바주재 한국특파원들과의 기자회견에서 “김일성-김정일 승계체제 여부는 북한국민에게 달려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 승계체제가 이루어지든 안이루어지든 북한정권의 안정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정에도 유익하다”⁷⁷⁾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러시아연방은 남북한간에 상호불신과 적대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韓半島統一이 단시일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러시아연방은 한반도의 급속한 통일이 동북아질서 불안정을 隋伴, 자국의 개혁정책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남북한 평화공존 유지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經濟面에서, 러시아연방은 현재 한국과의 최대 현안인 구소련 차관문제를 첨단무기 제공 및 공동개발·생산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한국의 투자를 적극 誘致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러시아연방은 수출확대, 부채문제 해결 등을 통하여 북한과의 경험 정상화와 두만강 개발을 통한 북한의 동북아경제권 편입을 모색할 것으로 展望된다. 그러나 러시아연방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직면해 있는 경제난과 북한이 체제유지의 필요성 때문에 제한된 개방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制約性으로 러·북간 경제관계의 큰 진전은 기대되지 않는다. 따라서 러시아연방은 당분간 한국중심의 경제외교를 탈피할 수 없을 것이나 한·러간 무역규모는 구소차관 상환문제, 러시아연방의 저렴한 중국산 소비재 선호 등으로 단기내에 급속히 增加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77) 「조선일보」, 1993. 12. 18.

軍事面에서, 러시아연방은 동북아 지역내 유리한 안보환경 조성과 아·태국가로서의 위상확립 및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한국과 고위 군인사 및 함정의 상호방문, 합동훈련 실시 등 軍事交流를 강화하고 교착상태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과의 군사관계를 발전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硬貨獲得을 목표로 대외무기판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러시아연방은 상업차원을 구실로 하여 북한에 대해서도 무기판매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연방은 향후 자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아·태지역 안보협약체」의 준비단계로서 「동북아 다자간안보협력체」 構成論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남북한간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군축과 군비통제의 가능성을 摸索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러시아연방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를 포함, 한국정부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계속할 것으로 豫測된다. 특히 러시아연방은 평양과 서울간의 긴장이 고조되어 있고 「팀스피리트」 군사훈련과 관련하여 미국과 한국도 북한의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한반도 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남북한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妥協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⁷⁸⁾ 따라서 러시아연방은 향후 남북한에 대하여 상호 양보와 타협을 강력히 促求할 것으로 전망된다.

78) 「모스크바 방송」, 1993. 12. 11.

2. 長期：韓半島統一 過程에 積極 參與

전술한 바와 같이, 러시아연방 정부나 학계내에서는 향후의 한반도통일 방식과 관련하여 일치된 의견이 없고, 일부는 한반도통일이 한국주도하에 달성될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사회과학아카데미」 연구위원 김명호씨가 러시아연방내 연구소들과 외무부 및 「프라우다」 등 각계의 한반도문제 전문가 30명에게 2005년까지의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設問 調査를 실시하였는 바, 그 결과는 한반도통일 문제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입장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큰 示唆點을 주고 있다. 설문에 응답한 다수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한반도통일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1993~1995年頃：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交叉承認 완결, 제한된 범위내의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간의 경협 활성화

1996~1998年頃：군사분야에서의 남북한간 신뢰구축 및 군비 축소, 북한의 대남혁명노선 수정 또는 포기, 남북한간의 전면적인 직교역 실시, 인적·문화·과학·기술교류의 확대, 南北頂上會談 개최 및 상설대표부 설치, 통일원칙과 통일형태에 관한 남북정치회담의 본격화

1999~2001年頃：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한국 해외기업체의 북한인력 고용, 육로 및 해상 교통로 개

방, 남북한 經濟統合 및 「남북연합」과 「고려민주연방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통일 헌법 제정 노력

2002~2004年頃: 政治·經濟體制 統一

2005年 頃~그 以後: 완전한 민족통일 실현⁷⁹⁾

한반도가 러시아연방의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 경제력이 우월한 한국의 주도하에 통일이 되든지 또는 다수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이 豫見하는 바와 같이 남북한간의 합의에 의하여 통일되든지 중요한 점은 러시아연방이 長期的으로는 한반도통일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러시아연방은 남북한간의 정상회담이 실현될 때까지는 남북한의 자주적인 행동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한반도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정상들의 多國間 협의의 場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향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⁸⁰⁾ 따라서 한반도통일 문제가 1990년대 후반에 국제화되는 趨勢를 보이면 남북한과 수교를 하고 있는 러시아연방은 동북아 및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국간 협의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79) 김명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의 ...,” pp. 79~81; 「한국일보」, 1993. 11. 13.

80) 이는 로가초프 엘친 대통령특사가 방일중 1992년 3월 13일 「日本經濟新聞」과의 회견에서 밝힌 내용이다.

豫想된다.

또한 러시아연방은 통일한국이 자국에 우호적인 국가가 되고 일본과 중국의 역내 영향력 증대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浮上할 경우에는 한반도통일을 적극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연방은 이미 사회주의체제를 청산하였고 일본과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할 필요성 때문에 한반도통일이 가시화 되더라도 독일의境遇와는 다르게 통일 한국의 군사적 위상을 문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서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계속 容認할 것으로 전망된다.

第 V 章 韓國의 對應方案

러시아연방의 향후 대한반도정책이 上記와 같은 방향으로 전개된다고 전제할 때, 한국은 한반도 평화구축과 통일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러시아연방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政治·軍事面에서 첫째, 러시아연방에서는 강력한 대통령제 신헌법이 채택되었고 급진적 개혁으로부터 점진적 온건개혁으로의 경제정책 전환이 예상되는 바, 정국이 안정되는 가운데 1994~1995년 기간중 경제가 점차 好轉되는 경우 엘친 대통령이 1996년에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경제가 현재보다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보·혁간 권력투쟁의 재현이 전망된다.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대외무역 등 일부 분야에서 러시아연방 개혁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미국 등 서방이 엘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엘친 대통령의 지속적인 改革推進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되, 1996년 엘친 대통령이 재집권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체르노미르딘 총리, 군산복합체 출신의 소스코베츠 제1부총리 등과 紐帶關係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러시아연방은 한국의 구소차관 상환문제를 첨단무기 제공 및 공동개발·생산 등의 方法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으나 한국은 북한과 동일한 무기보유로 인한 무기체제의 혼란 및 남북한간 군비경쟁의 가능성, 대미관계 등을 考慮하여야 할 것이

다.

셋째, 한반도 핵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연방은 한국이 언제라도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하에서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불안감에 어느 정도 同調하고 있기 때문에⁸¹⁾ 한국은 핵무기 보유의사가 없음을 러시아연방측에 주지시키는 한편, 북한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전면사찰 뿐만 아니라 남북한 상호핵사찰을 貫徹해야 할 것이다.

넷째, 러시아연방은 자국 핵과학자들과 핵물질의 해외유출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핵과학자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제3국의 핵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북한은 1992년 봄 「독립국가연합」내 밀수업자들로부터 약 56kg의 플루토늄을 밀수입하였다는 未確認 보도도 있다.⁸²⁾ 따라서 한국은 러시아 핵과학자들의 개별적인 북한입국과 핵물질의 밀수출 방지를 러시아연방측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러시아연방은 향후 상업적 次元을 구실로 대북한 무기수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바, 한국은 이를 경계하고 러시아연방측의 自制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經濟面에서 첫째, 한국은 한·러간의 최대현안인 구소차관 문제가 러시아연방이 제의하고 있는 무기공동생산을 통한 방법이 아니라 알루미늄, 원유, 농축우라늄 등 천연자원의 現物償還을 통한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81) 본문 pp. 46~47 참조.

82) 「조선일보」, 1992. 4. 25.

둘째, 옐친 대통령은 1993년 9월 의회해산 이후 군산복합체 지도자들과 군부의 지지확보 차원에서 군수산업의 민수전환 속도를 늦추고 있는 바, 이에 따른 한국의 러시아연방 민수화작업 참여계획에 대한 再調整이 요구된다.

셋째, 중국은 북한의 나진항 확장개발사업과 철도건설에 한국기업이 중국과 합작형태로 참여하는 방안을 肯定的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북한도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⁸³⁾ 러시아연방의 21개 기업들도 나진-선봉지구 하부구조 개발을 위하여 1억달러를 투자하는 계약을 1993년 9월 북한과 締結한 바 있기 때문에 한국은 경제외교 다변화와 북한의 동북아경제권 편입 및 개방유도 차원에서 러시아연방 기업들과도 합작형태로 이에 참여하는 방안을 講究할 필요가 있다.

韓半島 統一關聯 問題面에서 첫째, 러시아연방내 다수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한국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남북연합」이 1999~2001년경 수립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고려민주연방제」식의 통합도 같은 시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豫見하고 있다. 「고려민주연방제」의 궁극적인 목표가 한반도 공산화에 있는 바, 한국은 북한 대남 전략의 이중성과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의 本質을 국제학술회의 등을 통하여 러시아연방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에게 정확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83) 「조선일보」, 1994. 1. 24.

둘째, 일부의 러시아연방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에 의하여 吸收統一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한반도에서의 최악의 상태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러시아연방측의 希望과 같이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방안임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러시아연방은 현재 북한에 대하여 인권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바, 한국은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문제도 人權次元에서 다루어줄 것을 러시아연방측에 촉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한 交叉承認의 완결시 러시아연방은 대북한 영향력 유지 및 확대 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한국의 통일환경 조성에 否定的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러시아연방과의 제반관계를 확대하는 한편, 후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轉換과 동북아 다자간안보협의체 구성을 위한 韓半島 周邊4強 外交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단행본

金達中 編. 「蘇聯의 亞細亞政策과 韓半島」. 韓國共產圈研究協
議會 研究論叢 第6集, 198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지역경제」. 1993. 8.

*Institut Vostokovedeniya Akademii Nauk SSSR. Otnosheniya
Sovetskogom Soyuzu s narodnoy Koreey 1945-1980,
Dokumenty i Materialy. Moskva: Izdatelstvo Nauka,
1981.*

*Rede von Michail Gorbatschow in Wladiwostok 28. Juli 1986
Moskau: APN-Verlag, 1986.*

*Sowjetunion Heute. Nr. 10, Dokumente: Aussenpolitische
Ausfuehrungen Michail Gorbatschows in
Krasnojarsk. Oktober 1988.*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Russia,
2nd / 3rd quarter 1993. London: EIU, 1993.*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South
Korea North Korea, 3rd quarter 1993 / 1993/1994.
London: EIU, 1993.*

2. 논문

- 김명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의 한국학 전문가 30명이 본 한반도 평화정책과 통일환경 전망.” 「통일한국」. 통권 제120호, 1993. 12.
- 김영삼. “태평양 시대와 한국의 「신외교」.” 「공보」. 제26차 태평양 경제협의회(PBEC) 총회 연설문, 1993. 5. 24.
- 브로니스라브 오멜리체프(CIS 군총사령부 제1참모차장). “군축협상의 경험과 한반도에서의 적용가능성.” 북한연구소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공동주최 한반도 군축 4개국 학술회의 발표논문, 1992. 6. 1.
- 서현섭. “기획특집: 북한과 러시아의 어제와 오늘, 동맹관계에서 국가적 관계로 전환.” 「월간북한」. 통권 261호, 1993. 9.
- 트카첸코. “러시아-북한관계의 변화와 양한관계 영향.” 한양대 중소연구소 세미나, 1993. 5. 24. 「주요자료 전문집」. 연합통신, 1993. 6. 1.
- 한승주. “한국 신외교의 기조 — 세계와 미래지향의 신한국 외교 —.” 외교협회 주최 오찬회 연설문, 1993. 5. 31.
- Anosova, Lyudmila A. “East Siberia and the Russian Far East: The Field for Russian-Korean Long-Term Cooperation.” a paper presented at the Fifth ISSS-IFES Joint Conference, Seoul, Hotel President, October 13/14, 1992.

- Arbatov, Alexei. "Empire or great Power?" *New Times*. 1993. 1.
- Chufrin, Gennady. "Russian Policy towards the DPRK: Goals and Uncertainties." 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our Major Powers' Policies toward the DPRK by The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eptember 30, 1992.
- Kislov, Alexander. "Russia and Northeast Asia."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XXIII, no. 4, Winter 1992.
- Miasnikov, Vladimir. "Russia in the New Concert of East Asian Powers." a paper prepared fo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New Asian-Pacific Era and Korea."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August 20/21, 1992.
- "Russia's Foreign Policy Concept." *International Affairs*. Moscow, 1. 1993.
- Stefashin, Viktor. "Scenarios: Development of the Military — Political Situation in the *Far East*." *Far Eastern Affairs*. no. 2, 1992.
- Tkachenko, Vadim P.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Korea and the Russian Position." a paper

prepared for the Fifth ISSS-IFES Joint Conference, Seoul, Hotel President, October 13/14, 1992.

Zhebin, Alexander Z. "Russian-North Korean Relations: Present and Future." a paper prepared for the Fifth ISSS-IFES Joint Conference, Seoul, Hotel President, October 13/14, 1992.

3. 기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신문」.

「한국일보」.

「讀賣新聞」.

「日本經濟新聞」.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Defence New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Izvestiya.

New York Times.

Rossiyskaya Gazeta.

The Korea Herald.

● 發刊資料目錄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 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社會 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 1990년대 東北亞秩序 豫測(III) -
- 93-07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
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一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北韓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교포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綜合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열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
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
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 會議을 契機로 본 亞·太
地域協力の 展開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1993. 12. 31)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3~1994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資料〉

92-01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 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研究報告書 93-28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9252 , FAX : 232-5341

印刷處 양동문화사 전화 : 272-1767

印刷日 1993년 12월 일

發行日 1993년 12월 일
